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86
----------	-------

발의연월일 : 2025. 5. 22.

발 의 자 : 조인철 · 이개호 · 박수현  
주철현 · 문진석 · 한정애  
박민규 · 박용갑 · 정진욱  
이해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한 금융정보 탈취, 신원 도용과 같은 2차 피해의 발생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 및 법적 책임성을 제고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5항 중 “한다”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에게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 침해사고의 예보·경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방송하도록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문자·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4제1항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지를”을 “방지와 이용자 피해의 구제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을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로, “요구할”을 “명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침해사고의”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로 한다.

1.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 조치
2.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구제 조치
1.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2.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8조의7(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이행강제금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채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제4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48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 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 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 야 한다.	⑤ ----- ----- ----- ----- -----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⑦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u> <u>국민에게 침해사고 관련 정보</u> <u>를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하는</u> <u>경우 침해사고의 예보·경보를</u> <u>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u> <u>「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u> <u>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u> <u>이를 신속하게 방송하도록 요</u> <u>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u> <u>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u> <u>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문자·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  
-----피해  
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 조치

2.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구제 조치

② -----  
-----  
-----  
-----  
-----방지와 이용자  
피해의 구제를-----  
-----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  
· 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  
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  
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신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6항  
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 .
1.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
  2.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  
책 마련

⑦ -----  
-----  
-----

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⑧ (생략)

<신설>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의7(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

<신 설>

합한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이행강제금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 4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행기한  
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  
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  
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  
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  
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

<p>제76조(과태료)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4의4.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③ · ④ (생 략)</p>	<p><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4의4. (현행과 같음)</p> <p><u>4의5. 제4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u></p> <p><u>4의6. 제48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